

조선시대 '시민사회' 논쟁의 비판적 재해석

이영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정치사상 전공

yiyoungjae@daum.net

I. 문제의 제기

II. 조선시대 '시민사회' 논쟁과 쟁점

III. 18세기: 조선시대 자발적 결사체의 확장기

IV. 조선 후기 자발적 결사체의 사상적 동력

V. 맺음말

I. 문제의 제기

일제 식민사관이 심어놓은 ‘열등적·패배적’ 조선사관 탓에 한국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상당수의 논의는 조선시대를 ‘무능’과 ‘구태’의 상징으로 제쳐둔 채 근대화의 열거를 맞추어왔다. 그 한 축이 소위 ‘식민지근대화론’이다. 경제사학계를 주축으로 한 ‘식민지근대화론’은 조선왕조를 정체된 ‘무능·부패·봉건’ 왕조로 규정하고, 조선-식민 시기 통계지표를 발굴·활용하여 식민 시기에 와서야 경제지표상 ‘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한국의 근대를 설명한다.¹⁾ 역사적 ‘사실’과 ‘지표’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은 가치중립적 지표 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근대적 함의로 해석될 수 있는 조선의 정치적 역동성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에서 배제해왔다.

반면,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반작용 차원에서 ‘실학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근대화를 설명하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무능한 조선의 정치에도 불구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표방하던 비판적 지식인들이 존재했고 나아가 이 실사구시적 관점이 한국의 근대적 맹아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1930-1940년대 ‘조선학운동’의 일환으로 대두된 이래, 1950년대 민족운동과 접목되고, 식민사학과 대비되며 한층 강조되었다.²⁾ 위 두 논지가 비록 반대급부적 견지에서 제시되었지만 공교롭게도 조선시대를 구태적·정체적 정체(政體)로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조선 정체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은 애당초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결사체의 형성, 정치사회의 확장, 다양한 사상적 분기 등을 조망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른 한편,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16-18세기 조선의 정치·사회 변동 논쟁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임진왜란 이후 300여 년간 망해간 왕조라는 냉소적 평가를 떨쳐버리는 데 공헌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사림정

1) 이영훈 편, 『수랑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 후기』(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이영훈, 『대한민국이야기』(기파랑, 2007); 교과서포럼,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사』(기파랑, 200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식민지근대화론의 이해와 비판』(백산서당, 2004); 교수신문 기획·엮음, 『고종황제역사청문회』(푸른역사, 2005).

2) 홍원식 외, 『실학사상과 근대성』(예문서원, 1998); 배연숙, 「위당 정인보의 조선학 성립배경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 59권(2010), 406-414쪽; 신주백, 「『조선학운동』에 관한 연구동향과 새로운 시론적 탐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7권(2011), 188-190쪽; 유권중, 「한국의 실학과 근대성에 관한 논의」, 『한국민족문화』 제39호(2011), 3-29쪽.

치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식민사관의 ‘당쟁론’과는 다른 맥락에서 ‘붕당정치론’이 제기되었다.³⁾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탕평-민국정치론’이 부각되면서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 촉발하기도 하였다.⁴⁾ 그러나 아직 ‘붕당’과 ‘탕평’을 조화롭게 이해하기보다는 양자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이다.⁵⁾

여전히 조선정치를 해석하는 데 많은 쟁점이 산적해 있지만, 필자는 조선정치의 역동성에 주목했던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시론적 수준에서나마 ‘붕당정체-민국정체-반동(세도)정체’로 이어져온 조선의 정체 변화를 ‘민(民)’의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역사학과 사회과학이 결합하여 전개하고 있는 조선시대 ‘시민사회’ 논쟁이다. 이 논쟁을 통해 부각된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결사체’ 영역을 중심으로 조선 정체 변화의 함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조선시대 ‘시민사회’ 논쟁과 쟁점

1. 기존 연구의 검토

한국에서 시민사회 논의는 1987년 6월 민주화 이행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주요한 연구맥락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하버마

-
- 3) 이태진,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범조사, 1985), 13-26쪽; 이태진, 「사회와 붕당정치」, 『한국사특강』(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이성무, 『조선 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연구논총 92-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최이돈, 『조선 중기 사림정치구조연구』(일조각, 1994); 강광식, 「붕당정치와 조선조 유교정치 체제의 지배구조 변동 양상」, 『OUGHTOPIA』 제24권 제1호(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101-136쪽; 이현출, 「사림정치기의 공론정치 전통과 현대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3호(2002), 115-134쪽.
- 4) 金成潤, 『朝鮮後期 蕩平政治研究』(지식산업사, 1997); 이태진, 「대한제국의 황제정과 민국정치이념」, 『한국문화』 제22권(1998), 233-276쪽; 이태진, 「18세기 韓國史에서 民의 사회적·정치적 위상」, 『진단학보』 제88호(1999), 249-263쪽;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푸른역사, 1998).
- 5) 김백철, 「朝鮮時代 歷史像과 共時性의 재검토: 14-18세기 한국사 발전모델의 모색」, 『韓國思想史學』 第44輯(2013), 273쪽.

스(J. Habermas)나 그람시(A. Gramsci) 등의 진보적 시민사회론을 활용하고, 이를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하거나, 시민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었다.⁶⁾ 민주화 이행 이후 이와 같은 시민사회 논의가 활성화된 반면, 한국적 맥락에서 시민사회의 기원과 형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있었다.

근·현대사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와 관련한 연구는 '계급이론적 차원의 접근'⁷⁾ 또는 '자유', '권리', '국민'과 같은 서구 근대 정치 개념의 한국적 '수용' 또는 '대입'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⁸⁾ 반면, 한국사회에 근대 서구적 개념에 필적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의도 다수 있었다.⁹⁾ 다른 한편, '일제강점기하에서 종교계와 민족운동 진영 등의 시민단체 활동'과 같이 식민 시기 결사체 활동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¹⁰⁾ 그러나 서구의 계급이론적 시각으로 조선시대를 재단하려는 시도나 '왕의 목을 친 근대혁명' 또는 '시민혁명의 전통'이 없다는 단정하에 한국 정치사회에 서구적 근대제도의 이식을 당연하게 전제하는 논의들은

-
- 6)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한울, 1992); 최장집·임현진 공편, 『시민사회의 도전』(나남, 1993); 김호기, 「그람시적 시민사회론과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 한국적 수용을 위한 비판적 탐색」, 『경제와 사회』 19권(1993), 1-21쪽; 유팔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한울, 1995); 정태석,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유럽과 한국의 유사성과 차이」, 『경제와 사회』 72권 겨울호(2006), 125-147쪽 외 다수.
 - 7) 고성국,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 『아시아문화』 제10호(1992), 181-203쪽. 한국사회성격 논쟁과 관련하여 '공민' 개념을 경제사적 측면에서 제기한 논의로는 최배근, 「시민사회(론)의 불완전성과 '公民'의 역사적 성격」, 『경제와 사회』 19권(1993), 59-77쪽.
 - 8) 유병용,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재검토: '자유'와 '권리'의 동양적 이해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24집 1호(2002), 141-165쪽; 오문환, 「동학에 나타난 민주주의: 인권, 공공성, 국민주권」, 『한국학논집』 제32집(2005), 179-212쪽; 김윤희, 「근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인민 개념 형성(1876-1984)」, 『역사문제연구』 제21호(2009), 295-331쪽; 심인보, 「19세기 말 미국농민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의 비교사적 검토와 시론(I)」, 『東學研究』 제21집(2006), 131-158쪽.
 - 9) 한홍구는 '시민혁명 없는 시민사회'를 지적한다(「한국의 시민사회, 역사는 있는가」, 『시민과 세계』 제1권, 2002, 91-110쪽); 송호근은 '교양시민의 부재'를 거론하고 있다(「공론장의 역사적 형성과정: 왜 우리는 不通社會인가?」, 『한국 사회의 소통위기: 진단과 전망』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2011, 27-48쪽).
 - 10) 장규식, 「1920-30년대 YMCA 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호(1995), 207-261쪽; 장규식, 「YMCA학생운동과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0집 봄호(2002), 108-140쪽; 성주현, 「일제강점 천도교청년당의 대중화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0집(2008), 257-297쪽; 이현주, 「일제하(수양)동우회의 민족운동론과 신간회」, 『정신문화연구』 제26권 제3호 가을호(2003), 185-209쪽; 방상근, 「18-19세기 서울 지역 천주교도의 존재 형태」, 『서울학연구』 제26호(2006), 46-74쪽.

조선정치의 내재적 특성을 성공적으로 탐침해 들어가지 못했다. 일제강점기의 시민사회 관련 논의들 역시 조선과의 단절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조선정치의 내재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존재 여부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은 연구는 조혜인의 ‘공민사회’ 연구가 대표적이다.¹¹⁾ 그는 현대 이전의 한국사회에 시민사회가 없었다는 주장이 ‘오해된 동양적 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에 사로잡힌’ 편견이라고 단언한다. 조선시대 공민사회의 존재를 주장한 이 논문의 게재 직후 같은 저널(*Korea Journal*)에 스타인버그(David I. Steinberg)가 즉각 반론을 제기하며 조선시대 ‘시민사회’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일련의 논쟁이 시작되었다.¹²⁾ 이미 1992년부터 조선의 정치사회에 주목해온 던컨(John Duncan)은 조혜인과 스타인버그의 논지를 각기 비판하며, 조선시대 시민사회 부재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시장경제의 사회적 분화과정을 중심으로 피력하였다.¹³⁾ 그 후 조혜인은 ‘유교적 정통주의를 들어 조선사회가 다원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공민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스타인버그 등의 주장을 재차 비판하였다. 조혜인은 “다원주의는 공민사회 개념의 본원적 요소가 전혀 아니”라고 스타인버그를 비판하며,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율적인’ 사회라는 자신의 ‘공민사회’ 정의를 다시금 강조하였다. 조혜인에 따르면 “다원주의는 근대 공민사회 개념이 사용되고 정립된 후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그와는 다분히 상치되는 전통으로 출현한 개념”이다.¹⁴⁾ 최근 이 논쟁에 개입한 김영민은 ‘시민사회’를 논구하는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관점 차이를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진전된 조선시대의 시민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반’, ‘유교’, ‘공서관념’, ‘국가론’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¹⁵⁾

11) Cho Hein, “The Historical Origin of Civil Society in Korea,” *Korea Journal*, Vol. 37, No. 2(1997), pp. 24-41.

12) David Steinberg,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in Korea,” *Korea Journal*, Vol. 37, No. 3(1997), pp. 145-165.

13) John Duncan, “The Problematic Modernity of Confucianism: the Question of ‘Civil Society’ in Choson Dynasty Korea,” in Charles K. Armstrong eds.,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London: Routledge, 1992·2006), pp. 33-52.

14) 조혜인, 『동에서 서로 퍼진 근대 공민사회』(집문당, 2012), 146쪽.

15) 김영민, 「조선시대 시민사회론의 재검토」,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3호(2013), 1-21쪽. 특히 김영민의 연구는 조혜인과 스타인버그, 던컨의 논점 외에 역사학자인 자현 김 하부시(Jahyun Kim Haboush)가 주목한 국가와 구분되는 공공영역으로서의 서원에

조선시대 ‘시민사회’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일련의 논쟁에서 첫 번째 쟁점은 시민사회를 어떻게 개념 정의하는가의 문제다. 조혜인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적일 수 있는 공간이 해당 사회에 있느냐” 여부로 정의한다.¹⁶⁾ 스타인버그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면서 공동의 관심을 가지는 개인들의 사적 결사체이고, 상당 기간 동안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행동하며 집단 결속력을 유지하면서 정체(regime)의 교체가 아니라 사회적 또는 공적 정책의 변화를 피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한다.¹⁷⁾ 이 두 개념 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 ‘시민사회’를 논구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자율적이면서 결속력을 갖고 사회적·공적 역할을 하는 결사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사회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함의를 도출해볼 수 있으나, 과연 조선시대에 자율적 영역이 존재했느냐? 여부를 둘러싼 두 번째 쟁점은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재야사림(士林, backwoods literati)’이 충분히 중앙정치권력에 대해 자율성을 유지하며, 정치사회적 견제 역할을 했다는 조혜인의 해석과 비록 자율적 측면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성리학이라는 지배이념의 강한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시민사회로 볼 수 없다는 스타인버그의 반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던컨 역시 ‘사림(양반)’이 국가로부터 자율적이었거나 충분한 긴장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선이 서구의 시장경제가 가져온 사회적 분화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¹⁸⁾ 다양성을 시민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는 스타인버그는 조선을 다양성이 존재하기 어려운 통제된 사회로 간주한다.¹⁹⁾ 이 문제는 조선의 ‘시민사회’ 또는 ‘결사체’ 논의에 중요한 쟁점이다. 조혜인의 지적과 같이 던컨과 스타인버그의 견해가 ‘오해된 동양적 전제주의의 편견’이라면 몰라도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민사회’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시민사회를 둘러싼 논쟁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필자는 두 가지 쟁점에 집중하고자 한다.

대한 분석을 소개함으로써 조선시대 시민사회를 둘러싼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같은 논문, 7-8쪽).

16) Cho Hein, *op. cit.*, p. 25.

17) David Steinberg, *op. cit.*, p. 148.

18) John Duncan, *op. cit.*, p. 50.

19) David Steinberg, *op. cit.*, pp. 150-151.

첫째, 시민사회의 개념 정의이다. 조혜인과 스타인버그의 개념 정의에 따라 시민사회를 ‘국가로부터 자율적이면서, 결속력을 갖고 사회적·공적 역할을 하는 (사적)결사체’로 정의하면, ‘공민사회’를 조선의 시민사회로 간주한 조혜인의 분석은 주체적·시기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조선시대 ‘시민사회’의 주체를 굳이 ‘공민’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18세기 이후 다양한 신분적 변동이 진행된 조선 후기의 경우 ‘민’의 결사체 영역까지 시민사회의 범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야사람’을 주체로 한 공민사회 분석은 조선의 시민사회를 일면적으로 이해하는 셈이 되고 만다.

둘째, 조선사회가 일관된 성리학적 지배이념으로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였는지 여부다. 이는 조혜인의 정의와 같이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이 존재했느냐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필자는 성리학적 이념으로부터 자율적인 사상적 분기가 존재했다고 본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특히 특정 권문세가가 주도한 세도정치기에 일부 사립의 경우 성리학적 이념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6세기경부터 성리학 중심의 지배이념과 궤를 달리하는 사상적 분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시민사회 논쟁을 다루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글에서도 ‘시민사회’ 개념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인지 여부다. 필자는 시민사회 개념을 일정 정도 조선시대에 부합하도록 확장적 맥락에서 활용하는 것이 조선정치사 분석에 유용하다면, 이러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른테면 부르주아의 정치적 과위의 성장을 반영한 민주적 결사영역과 같은 시민사회의 관습적 정의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조선에 부르주아가 존재했느냐고 묻기보다는, 부르주아와 비교의 맥락을 형성할 수 있는 정치 행위자는 누가 있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국가권력에 순응했는지 저항했는지 이분법적으로 묻기 이전에, 정치 행위자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허용하는 행동의 반경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구적 개념을 그대로 조선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²¹⁾ 이러한 오래된 논쟁에 휘말릴

20) 김영민, 앞의 논문, 18쪽.

21) 조혜인은 역으로 근대 공민사회가 동에서 서로 퍼진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조혜인,

경우 논지의 본말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개념 정의에 따라 필자는 시민사회 대신 ‘국가로부터 자율적이면서, 결속력을 갖고 사회적·공적 역할을 하는 (사적)결사체’에 부합하는 ‘결사체(association)’ 개념을 주로 활용할 것이다.²²⁾

결사체는 가족이나 친구집단과 같은 제1차 결사체는 물론 시민단체, 스포츠클럽, 종교단체와 같은 제2차 결사체를 포함한다. 이 제2차 결사체에는 이익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이 속하기도 한다. 또한 결사체는 구성원들이 공유한 목표, 규범, 문화적 유사성, 구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목표달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²³⁾ 조선시대 ‘시민사회’ 개념 대신 결사체 개념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공적·사적 영역을 넘나드는 결사체의 특성과 양반사회뿐만 아니라 각종 계(契)나 동학의 접과 포와 같은 단위 등 민의 영역에서 확대되는 다양한 결사를 포괄하기에 적절한 개념이기 때문이다.²⁴⁾

앞의 책(2012) 참조.

22) 이 글의 심사과정에서 익명의 심사자는 “시민사회를 결사체 개념으로 대체할 경우 조선 전기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결사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시민사회 논의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였다. 이 지적은 시민사회를 정의하는 데 ‘주체의 문제’, ‘국가의 성격’, ‘경제 구조’, ‘사상적 자율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한 문제제기이다. 그러나 고려나 삼국시대의 국가와 조선시대의 국가를 대별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정된 지면을 핑계로 필자의 암묵적 전제를 밝히는 선에서만 답하고자 한다. 김영민이 도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혜인과 스타인버그의 논쟁에서는 조선의 국가를 첫째, 중앙집권주의적 국가 또는 중앙집권화된 가산제 국가로 볼 것인지, 둘째, 근대적 성격을 가진 관료제 국가로 볼 것인지 여부가 암묵적 전제였다. 스타인버그가 전자의 입장이라면, 조혜인은 후자의 입장이다(김영민, 앞의 논문, 15-16쪽; 각주 32) 조혜인의 논지 참조). 필자는 후자의 입장과 유사하며,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의 수준에서 이전 시대와 구분되고, 왕권의 전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원리와 능력을 중심으로 한 관료 충원 원리를 바탕으로 관료제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18세기를 거치며 가산제와는 구분되는 상당한 경제적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국’ 정체의 대두 이후 민의 정치적 의미와 신분계층성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결사체 개념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봉당정치기 이후의 결사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23) Mark E. Warren, *Democracy and Association*(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 39.

24) 매키버(MacIver)는 커뮤니티(communitiy)를 마을이나 소도시, 또는 국가와 같이 일정한 지역적 경계 안에서 공통의 생활을 하는 생활지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공동의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결사체와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Robert. M. MacIver, *On Community, Society, and Power*, ed., by Leon Barms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p. 29-30). 결사체와 관련하여 최근 매키버나 티니스 등의 이분법적 구분에 비판을 제기하고 공동체, 조직체, 결사체 등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논의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보다 세밀한 구분은 이 글의

2. 조선시대 ‘시민사회’의 주체 문제

주지하듯이 ‘시민사회’ 개념은 근대화의 산물이다. 근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상호 유기적 연관 속에서 관찰되어왔다. 특정 시점에 일제히 ‘근대가 개시된 것이 아니듯이 근대화는 전근대적 요소들과 상당 기간 혼재된 채 과도기적 양상을 거쳐 확립되었다. 시민사회 개념 역시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다양한 기원적·해석적 차이를 보이며 정립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시민사회의 전통을 중세의 ‘길드(guild)’로부터 찾고 있는 시도가 이러한 근대 전환기의 과도기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²⁵⁾ 또한 시민사회의 어원적 뿌리를 찾기 위하여 *societas civilis*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고대 그리스의 *polis*로부터 그 원형을 거론하기도 한다.²⁶⁾ 다른 한편, 시민사회의 주체가 ‘사인(私人)’이나, ‘공민(公民)’이나의 문제도 중요한 쟁점을 형성해왔다. 이는 곧 시민사회를 사적 영역으로 이해하느냐, 공적 영역으로 이해하느냐 여부를 가르는 것이기도 하다.

헤겔은 각각의 영역에서의 주체, 즉 가족에서는 가족원, 시민사회에서는 ‘시민(*Bürger*)’, 정치적 국가에서는 ‘공민(*Staatsbürger*)’을 구분한다. 헤겔의 ‘시민사회(*bürgerliche Gesellschaft*)’는 개인적인 요구와 이익이 타인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인간의 사회적 삶의 국면을 나타낸다. 녹스(Knox)는 헤겔의 시민사회 주체를 개인적인 요구와 이익, 즉 사적 요구를 추구하는 부르주아지라고 정의한다. 녹스에 따르면, “(헤겔의-인용자) 시민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심이며, 시민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²⁷⁾ “이것은 경제적 생활영역이며, 그 사회의 조화는 정치경제학의 법칙으로 표현되고, 그 사회의 내용은 이기적 목적의 추구이다.”²⁸⁾ 헤겔의

범주를 벗어난다. 이에 대해서는 전병재, 「공동체와 결사체」, 『사회와 이론』 제1집 창간호(2002), 49-78쪽 참조.

25) Antony Black, *Guilds and Civil Society in European Political Thought from the Twelfth Century to the Present*(Cambridge Univ. Press, 1984).

26) *societas civilis*까지 개념사를 확장하는 이유는 국가와 사회의 합일상태를 의미하는 *societas civilis*와 달리 근대 시민사회는 국가와 사회의 분리를 그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27)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1821), translated by T. M. Knox, *Hegel's Philosophy of Right*(Oxford University, 1967), p. 189.

이 '시민사회(*bürgerliche Gesellschaft*)' 개념은 오늘날 공적 영역을 구성하는 시민사회(*Zivilgesellschaft* 또는 *Zivile Gesellschaft*)와 구분되는 사적 영역을 지칭한다.²⁹⁾

시민사회의 주체와 관련한 '사인(*bourgeois*)'과 '공민(*citioyen*)'의 구분은 중요한 차이를 야기한다. Civil이 *Bürger(bourgeois)*와 *Staatsbürger(citioyen)*의 양의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Civil Society는 *bürgerliche Gesellschaft*와 *Zivilgesellschaft* 또는 *Zivile Gesellschaft*의 두 가지 개념적 의미를 내포한다. 부르주아지가 사적 이해에 입각하여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사인(私人)'을 지칭한다면, '공민(公民)'은 국가의 일반적 이해에 입각하여 정치사회 속에서 공적 생활을 영위하는 정치적 양식을 지닌 구성원을 지칭한다. 조혜인이 포착하고 있는 조선시대 '재야사람'을 주체로 한 공민사회가 바로 이 후자에 해당한다.

조혜인은 civil society를 '공민사회'의 의미로 단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koinonia ploitike*, 즉 'polis적 공동체'를 키케로가 *societas civilis*, 즉 'civitas적 사회'로 번역할 때, 그리스어 *polis*와 라틴어 *civitas*는 당연히 둘 다 정확히 국가 또는 국민 내지 '공민'을 의미하는 말로 대응"³⁰⁾ 시키고 있기 때문에, Civil society를 '시민사회' 대신 '공민사회'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³¹⁾ 조혜인과 같이 '재야사람'을 국가로부터

28) *Ibid.*, p. 354.

29) 자유주의적 Civil Society 또는 헤겔적 'bürgerliche Gesellschaft'와 구별하기 위해 근래 독일 좌파 이론가들은 이 그림시적 '시민사회' 개념(국가와 경제 양자에 대해 구별되는 사회적 상부구조로서의 시민사회 개념)을 *Zivilgesellschaft*(또는 *Zivile Gesellschaft*)라는 신조어로 표기하고 있다(황태연, 『지배와 이성』, 창작과 비평사, 1996, 40쪽). 리델은 고전적 *societas civilis* 패러다임 붕괴가 헤겔(Hegel)의 『법철학』에서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Manfred Riedel, *Stud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69. 황태연 역, 『헤겔의 사회철학』, 한울, 1983, 55-57쪽). 코헨(J. Cohen)와 아라토(A. Arato) 역시 헤겔의 '시민사회(*bürgerliche Gesellschaft*)'로부터 근대적 시민사회 개념의 이론적 종합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J. L. Cohen & A. Arato,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MIT press, 1992, pp. 91-92). 반면, 킨은 페인(T. Paine)의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가 사회와 정부의 차이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J. Keane,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Verso, 1988, p. 36ff).

30) 조혜인, 『공민사회의 동과 서: 개념의 뿌리』(나남, 2009), 20쪽.

31) 정상호는 '공민'이 공적이 개념을 더 많이 담고 있고, 시민이라는 개념은 도시라는 공간에 결박되어 있다는 조혜인의 개념 접근에 대해 이 '공민사회' 주장은 민인들의 투쟁, 치자와 피치자 간에 역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역사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참여사회포럼,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국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시민과 세계』 제24호(2014), 281쪽.

자율성을 갖는 조선시대 ‘공민사회’의 주체로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공민사회’가 곧 조선시대의 ‘결사체 영역’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민이 정치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적·제도적 미성숙 단계에서 공적 영역으로만 자율적 결사체를 개념화할 경우 조선의 18세기 이후 확장되는 (‘재야사람’이 아닌) ‘민’의 자발적 결사체들은 이 ‘공민사회’ 범주로 포착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 없이 조혜인은 공민사회의 범주를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자율적일 수 있는 공간이 해당 사회에 있느냐 여부”로만 제시하고 있다.³²⁾ 국가로부터의 자율성만 따진다면, 군이 민의 자발적 결사체들을 제외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공민’이라는 주체적 제한으로 인해 ‘공민사회’는 시기적·주체적으로 18세기 조선의 정치사회적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16-17세기 봉당정치기에 한정된 접근이 되고 만다.

앞서 살펴본 스타인버그의 시민사회 개념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는 개인들의 사적 결사체”이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며 공적 정책이 변화를 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인’과 ‘공민’의 영역을 포괄하는 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즉, 조선사회 민의 자발적 결사체 영역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확장적이고 유연한 개념 정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스타인버그의 문제는 그가 ‘순종(conformity)’과 ‘정통(orthodoxy)’이 팽배한 조선사회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조선사회를 기본적으로 정해진 틀을 벗어날 수 없는 통제된 사회로만 해석한다는 점에 있다.³³⁾

스타인버그의 단편적 이해와 달리 18세기 조선의 정치사회는 ‘민국’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중요한 변동기였다. 대다수 논의가 근대적 역사의 여명을 이 시기에서 찾는다. 근래 역사학에서는 이 시기에 사족(士族) 중심의 향촌(鄉村) 지배체제가 새로 신분을 향상시킨 향임층(鄕任層)으로

32) 조혜인의 논지에 따르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는 근대 역사에서 서로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기원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출발했다.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와 특징적 연관이 없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도출되었다. 시민사회는 실제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던 근대 영국에서 탄생한 개념”이기 때문에 조선에서 시민사회를 운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Cho Hein, *op. cit.*, pp. 25-26). 물론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시민사회의 중요한 전제로 보는 조혜인은 조선의 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관료제적 근대국가로 포착한다(Cho Hein, *Ibid.*, p. 27).

33) David Steinberg, *op. cit.*, pp. 149-154.

부터 도전을 받았다든가, 정치적으로 군주들이 전제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사대부보다 민을 더 의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³⁴⁾ 18세기 민은 신분상승의 동향과 함께 사회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18세기 향촌사회는 지주제와 신분제, 국가의 군현제적 향촌통제책과 공동체적 질서의 변화가 강하게 나타난다.³⁵⁾ 준양반의 지위를 획득한 부류는 각기의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었다.³⁶⁾ 물론 사상적 측면에서도 ‘순종’과 ‘정통’이 확일적으로 관철되지 않았다.

Ⅲ. 18세기: 조선시대 자발적 결사체의 확장기

1. ‘공민사회’ 범주의 확장 필요성

조선시대 공민사회의 존재를 강력하게 제기한 조혜인은 사대부 사회를 한마디로 “선비가 공론의 과정을 통하여 아래로부터 이끌어가던 사회”로 정리한다. “재야 사대부들은 서원, 향청 외에도 각종 향약과 실로 다양한 차원의 계 등 흔히 공동체를 지향하는 결사체 조직에 기반을 두고 정부 밖 ‘향촌사회’의 자치를 이끌고 있었다. [...] 선비의 일부는 조정으로 진출하여 정부를 운영하는 담당 집단이 되었다. 이들의 관료집단은 [...] 스승과 동문으로부터 발해지는 공론에 입각하여 아래서 위로 이어지는 정치과정을 정부 내에서 이끌었다.” ‘사람’은 정치사회 영역에서 이들 전초집단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상소’라는 일상적인 상향적 교신활동을 통하여 정부 밖 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정부를 움직여가는 기둥이었다. 조혜인은 봉당을 “선비의 거국적인 내적 토의과정에서 나누어지게 된 정치적 분립체”로 파악하고, 나아가 “오늘날의 정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34) 이태진, 앞의 논문(1999), 249쪽. 반면 이 글의 심사과정에서 한 익명의 심사자는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18세기 중반 貢市堂上/貢市詢問의 설치에 왕정의 주요 포섭대상이 농민에서 賈人이나 市人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는 큰 틀에서 필자가 ‘민’으로 통칭하는 범주 속의 구체적 변화상을 지적해준 세심한 심사의견으로 지면을 빌려 감사한다.

35) 김인길, 「조선 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의 변동과 ‘民」, 『한국문화』 제9집(1988b), 321-331쪽.

36) 이태진, 앞의 논문(1999), 253쪽.

까지 해석한다.³⁷⁾

조선정치를 사림들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정체로 해석하고, ‘재야사림’을 공민사회의 주체로 해석하는 이 견해는 이미 16-17세기 봉당정체기부터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선 정치사회 전반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민사회 해석을 사발적 결사체의 주체적 측면과 더불어 시기적·범주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봉당정치의 폐해가 만연했던 17세기 후반의 조선은 사회적으로 신분구조상의 변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영·정조를 중심으로 한 탕평정치와 민국정체가 주창되면서 정체(政體)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조선의 정치사회를 사림정치로만 한정할 경우,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결사체 영역이 확대되는 조선의 18세기 변화상을 포착할 수 없다. 특히, 양반사회 내부의 변화는 조혜인이 공민사회의 주체로 지목한 ‘사림사회’의 변화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18세기에 접어들어 향촌의 ‘향약’과 ‘서원’ 중심의 사림정치가 퇴행하고, 민의 자율적 결사체가 확대되는 측면은 조선시대 정치사회 변화의 중요한 축이다.

둘째, 필자가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결사체 영역을 민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조선사회가 성리학적 지배이념이 일관되게 관철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혜인은 조선사회를 “성리학이라는 이념이 분화된 국가와 공민사회의 경계를 넘어 그 모든 당사자를 지배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같이 받드는 그 이념 밑에서 그렇게 협력하도록 만들고 있었다”고 이해한다.³⁸⁾ 이러한 이해는 조선 전체를 일관된 성리학적 지배가 관철된 것으로 귀결시킴으로써 스타인버그의 ‘순종·정통’ 중심의 일원적 조선 이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미 15세기 말부터 시작된 민중신앙적·사상적 분기는 조선 통치권력의 기반이었던 성리학과 다른 궤적을 보여준다. 15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엽까지 조선은 변화무쌍한 사상적 흐름이 아래로부터 분기하고 있었다. 실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대전란, 그리고 소빙기(1490-1760) 대기근의 지속, 15세기 말 연산군 때의 홍길동, 16세기 중후반 명종

37) 조혜인, 앞의 책(2009), 140-141쪽.

38) 위의 책, 141쪽.

때의 임궽정, 17세기 말엽 숙종 때의 장길산 등 의적들의 활동, 불만유생들의 광범한 산재, 각종 도참설적 이상사회론, 새로운 정치사상의 대두 등으로 조선의 왕권은 크게 동요했다.³⁹⁾ 18세기 신분적 변동에 따른 서당의 기능 강화로 이런 사상과 예언서들이 민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었고, 때로 이 자발적 결사체가 직접적인 정치적 저항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⁰⁾

이렇듯 조선시대 자발적 결사체와 정치사회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그동안 지배층 중심의 일원적 관점과 달리 조선정치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역동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준다. 조선정치사를 통치권력과 민의 관계 중심으로 조망해본다면, 조선 초기의 사대부 국가에서 민은 민유방본의 레토릭으로 연호되었지만 성리학적 통치체제의 '통치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 통치권력의 도구적·수사적 활용 단계를 거쳐 18세기 '민국' 시대에 와서 민은 정치사회의 실체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민국정체의 핵심 내용에는 영조의 "반사대부·소민노선"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반사대부·소민노선의 제기 배경과 의미를 반추해본다면, 민국이념은 조선 초기 민을 단순한 수사적 차원의 담론 수준에서 거론하던 추상성이 아니라 국가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한 군주의 '혁명적' 방책으로서의 실체성⁴¹⁾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세기 세도정치기 국가 공공성의 파탄 상황에서 '민'은 정치사회의 전면에 부상하였다. 조선 말기 동학농민혁명은 외세의 위압 앞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민'이 '보국안민', '척왜양의 기치를 걸고 정치사회의 전면에 등장한 대표적 사례이다.⁴²⁾

조선 전기 민은 관인이나 양반 등의 지배층은 물론 천신분과도 구분하

39) 황태연, 「조선시대 국가공공성의 구조변동과 근대화」,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변동: 국가·공론·민의 공공성, 그 길항과 집합의 역사』,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2012b), 202쪽; 고성훈, 『민란의 시대』(가람기획, 2004), 108쪽; 백승중, 『정감록 미스터리』(푸른역사, 2012), 247-248쪽.

40)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서당으로 읽는 조선교육의 흐름』(태학사, 2013).

41) 황태연은 민국이념이 군주 측만의 발상이라기보다 서민 대중사회의 성장을 군주 측에서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이태진)가 있다는 견해를 넘어 "세습군주정을 부정하는 혁명적 '근대정치사상' 및 왕조교체를 지향하는 민중적 개혁사상의 도전에 대하여 역동적으로 왕조를 지키려는 예방혁명적 국가혁신체제로도 간주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황태연, 앞의 논문(2012b), 202쪽.

42) 이영재, 「조선시대 정치적 공공성의 성격 변화: '민'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제19집 1호(2013), 65-79쪽.

여 직역상 농공상에 종사하는 양민의 뜻으로 많이 활용됨으로써 상하의 '계층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조선의 신분제에서 상하의 계층성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조선 후기 국가재조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시기는 영조대부터이다. 정조 9년에는 노비추쇄자에 게 상을 주는 법을 혁파하고, 그 다음해에 추쇄관을 혁파하여 노비들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노비도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순조 즉위년(1800)에 반포한 율음에 사농공상의 백성과 노소, 군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천민에 속했던 승려와 노비도 백성에 포함된 사실로 볼 때 조선 후기 민의 계층성은 거의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⁴³⁾

18세기를 전후한 조선사회에서 '민'의 삶의 영역인 향촌사회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 변화는 이제까지 단순한 보호의 대상, 지배의 대상으로만 여겨져온 민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를 창출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6-17세기까지 재지사족이 장악하고 있던 향촌사회 권력은 신분적 권위의 상징인 향안(鄉案)을 모체로 한 향회(鄉會)와 유향소(留鄉所)를 통해 수령권과의 유착 또는 길항적 관계 속에서 유지되었다. 18세기 이후 향촌사회는 기존 재지사림의 신분적 변화와 더불어 자발적 결사체의 주체가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2. 18세기 향촌사회 구조 변화의 단면

17세기 말부터 18세기 동안 조선의 '향권(鄉權)'은 '향전(鄉戰)'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신분적 각축의 과정에 있었다.⁴⁴⁾ 그 일단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재지 양반층으로서의 '유(儒)', '향(鄉)'에 주목할 필요가

43) 이석규, 「朝鮮初期 官人層의 民에 대한 認識」, 『역사학보』 제151집(1996), 41쪽; 한승연, 「조선 후기 民國 再造와 民 개념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2012), 58-63쪽.

44) 『朝鮮王朝實錄』에 '鄉戰'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60년 현종 때이다. 현종 1년 9월 2일(갑인) 1번째 기사. 그 후 숙종 6년과 숙종 10년에 한 번씩 향전에 관한 기록이 있다. 1680년 숙종 6년 5월 25일(계축) 1번째 기사. 숙종 10년 8월 21일(갑인) 1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에 향전에 관한 기록이 증가하는 것은 영조 집권 직후인 1725년 을사년부터이다. 영조 집권 51년인 1775년(을미) 9월 28일(계유) 2번째 기사까지 총 12회 등장한다. 정조 집권기에는 5회, 순조 집권기에는 2회로 점차 줄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있다.⁴⁵⁾ 향촌사회의 기존 지배층인 '사족(士族)'의 후예로서 '유(儒)(유림, 儒林)에 도전하고 있던 '향(鄉)(향품, 鄉品)층이 조선 후기 향촌의 신분구조 변동을 이해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지의 지배신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유향(儒鄉) 또는 '유(儒)와 '향(鄉)'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이고, 특히 18세기에 들어오면 거의 하나의 개념을 가진 용어로서 굳어져 사용된다. 16세기에는 사족(士族)과 양반(兩班)이 같이 쓰이는 가운데 주로 사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데 비해서, 이후의 시기에 들어와서는 사족이나 양반이란 용어가 지속적으로 쓰이는 가운데 그것과는 별개로 '유향'이 쓰였다는 사실은 향촌사회의 새로운 신분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⁶⁾

조혜인이 조선의 공민사회로 파악한 사림, 즉 재지지배층은 16세기 이래 향안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향회 및 유향소를 매개로 향권을 장악하고 신분적 이해를 관철시켜왔다. 물론 때로 관(官)(수령, 守令)과의 갈등이 있거나 타협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신분적 권위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다. 향안(鄉案)에는 전직 조관(朝官)이나 관품(官品)을 가진 자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부·모·처(父·母·妻) 삼향(三鄉)에 신분적 하자가 없는 지는 이들 향원(鄉員)들의 허락하에 입록이 가능하였고, 그 폐쇄성은 국가의 사판(仕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⁴⁷⁾ 그런데 18세기에 들어 이러한 향촌사회의 '유림'과 '향족'의 대립이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유림'은 향교나 서원을, 향족은 향소(향청)를 소거처로 하고 있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이들 사이의 갈등을 중앙정부에서는 관권에 도전하는 행위 또는 당평정국하에서 당론을 조장하는 정치적 문제로 파악할 정도였다.⁴⁸⁾ 영조 51년 3월 1일자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경기도사 박상갑을 포천에 정배하며 도신을 파직하고 '향전(鄉戰)'을 엄금하도록 했다는 기사가 있다.⁴⁹⁾ 여기서 '향전'이란 조선 후기

45) 조선 후기 향권의 추이에 주목한 초기 연구로는 김인걸, 「朝鮮後期 鄉權의 추이와 지배층 동향: 忠淸道 木川縣 事例」, 『한국문화』 제2집(1981), 167-251쪽; 李海濬, 「朝鮮後期 晉州地方 戶戶의 實態: 1832년 晉州鄉校修理記錄의 分析」, 『진단학보』 제60호(1985), 79-100쪽 참조.

46) 김인걸, 「17, 18세기 향촌사회 신분구조 변동과 '儒·鄉」, 『한국문화』 제11집(1990), 308쪽, 318쪽.

47) 김용덕, 『향안연구』, 한국연구원(1978); 김인걸, 「조선 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제19권(1988a), 318-323쪽; 김인걸, 위의 논문(1990), 308쪽.

48) 『承政院日記』 英祖 51년 3월 1일.

49) 『朝鮮王朝實錄』 英祖 51년 3월 1일(무신) 2번째 기사.

향촌사회에서 여러 세력이 향권을 두고 벌이는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戰)’으로 지칭할 정도였으니 그 치열한 갈등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18세기에 들어와 유향은 재지 양반집단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사족의 후예인 유림과 향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와 관련하여 사족을 자처하는 일군의 집단도 중앙정계와 연계되어 있던 세력과 함께 자신들을 그들과 구분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사족 내지 유림들은 향족 내지 향품이 자신들의 밑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⁵⁰⁾ 중앙정치에서 영조대에 ‘서얼허통(庶孽許通)’과, ‘서얼통청(庶孽通廳)’을 확대하여 서얼의 국정참여 수위를 대폭 높인 조치로 인해 향촌사회에서 중요한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경상도의 서얼 유생 김성천 등 3,000여 명이 서류를 통정한 후에도 향안에 등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상소를 올리자 영조가 그들의 뜻을 슬프게 여겨 특별히 비답을 내려 허락했는데, 체제공이 “영남의 향안(鄕案)은 방한(防限)이 매우 엄하여 비록 조정의 명령이 있더라도 영남 유생들은 반드시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즈음에 소란할 계제(階梯)가 생길까 염려됩니다.”라고 아뢰었다.⁵¹⁾ 또한 ‘매향(賣鄕)’ 또는 ‘매임(賣任)’으로 인한 신분 상승계층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로 불거졌다. 이 매향 문제는 단지 향촌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조 4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정식으로 문제가 될 정도였다. 지역에 따라 사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경향적으로 조선 후기 향촌세력들의 위상 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일정한 부를 축적한 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또는 수령의 강요에 의해서 새롭게 참여하는 등 향촌의 지배구조가 이전과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⁵²⁾

16, 17세기에 향촌사회의 지배신분층이었던 사족 양반은 향안을 매개로 하여 균현단위로 결집해 있었으며, 그들은 향청 외에 향교와 서원 등 (향촌의-인용자) 지배기구를 장악하고 있었다. 국가 역시 그들을 매개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17세기까지 유향이 병칭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18세기에 들어오면 ‘향’이 직임의 의미를 넘어 신분적 의미로까지 사용되

50) 김인걸, 앞의 논문(1990), 321-322쪽.

51) 『朝鮮王朝實錄』 英祖 48년 12월 28일(무자) 4번째 기사.

52) 김인걸, 앞의 논문(1990), 324-334쪽.

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구세력의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수 없었고, 각 세력 내부에서도 견해가 같았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향촌사회에서 신분제적 사회운영 원리가 붕괴되어가고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⁵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19세기 조선의 촌락사회는 크게 변모하고 있었다. 촌락사회는 기존의 사족지배체제의 틀을 벗고 관의 부세행정 체제에 종속되어가는 가운데 그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는 새로운 농민조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또한 각 사회세력의 지향을 반영하는 각종 조직이 발달하기도 하였다. 촌락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었던 것이다.⁵⁴⁾ 이러한 18세기 향촌사회의 구조 변화는 조선시대의 결사체 영역을 재지사림의 공민사회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확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실체적 단면이기도 하다.

IV. 조선 후기 자발적 결사체의 사상적 동력

1. 자발적 결사체의 사상적 동력

조혜인이 제시하는 서구 시민사회의 뿌리는 첫째,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도출되는 선지자(prophets) 전통과 둘째, 시민보호(civil protection)를 가능케 하는 법전통이다. 선지자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권위를 도출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은 국가라 하더라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인민의 공통된 신념으로부터 그들의 권위를 도출한다. 이 공통의 신념이 그들에게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권위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시민사회가 이러한 신념의 공동체로부터 출발하였다.⁵⁵⁾ 조혜인은 조선에서 이와 같은 인민의 공통된 신념에 기반한 자율성의 영역을 '재야 사림'으로 지칭한다.⁵⁶⁾

사람의 등장 배경과 결부된 역사적 해석의 문제를 여기서 일일이

53) 김인길, 앞의 논문(1990), 337-340쪽.

54) 김인길, 「조선 후기 촌락조직의 변모와 1862년 농민저항의 조직기반」, 『진단학보』 제67호(1989), 68쪽.

55) Cho Hein, *op. cit.*, pp. 25-26.

56) *Ibid.*, pp. 31-32.

논하기는 어렵다.⁵⁷⁾ 논의를 좁혀 조선의 정치·사회적 결사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쟁점은 자발적 결사를 가능하게 만든 사상적 흐름과 그 배경이다. 물론 성리학이 조선시대 통치권력의 기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⁵⁸⁾ 그러나 조선시대 전체를 성리학 일변도로만 볼 경우, 조선시대 자발적 결사체의 영역에 흐르는 다양한 사상적 분기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시민사회론의 쟁점을 재검토하며, 기존 논의의 잠재적 문제점들을 제시한 김영민은 먼저 ‘양반’의 범주를 보다 다면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의 경화사족과 재지사족의 정체성 차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계층들이 지속적으로 편입되어 심지어 ‘전 국민의 양반화 현상’이라고 불리는 현상 등을 반영해야 한다⁵⁹⁾는 그의 주장은 18세기 이후 조선의 신분제적 변화상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이 문제가 자발적 결사체의 주체적 측면과 관련하여 중요하다면, ‘유교’에 대한 이해 문제는 자발적 결사체의 내적 동력과 결부하여 또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 김영민은 ‘순종과 ‘정통’으로 단순화한 스타인버그의 성리학적 이해를 범박한 유교 이해로 평가절하하고, 유교라는 범주의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는 던컨의 입장은 타당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이 조선 유교의 핵심적 흐름이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⁶⁰⁾ 스타인버그의 범박한 유교 이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김영민 역시 조선 정치사회를 성리학 일변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혜인, 스타인버그 등과 크게 차별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선시대 성리학 전파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향촌의 서당만 보더라도 18세기부터 탈성리학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다. 향촌사회에 성리학이 토착화되기 시작한 16세기나 사회문화적 변동으로 새로운

57) 사림세력의 형성을 정치제도적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설명하는 논의로는 김범, 「조선시대 사림세력 형성의 역사적 배경」, 『국학연구』 19집(2011), 9-33쪽; 절의파의 계기적인 발전선상에서 사림파의 등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초기 정치적 변화의 맥락으로 사림파의 형성을 접근하는 논의로는 김훈식, 「朝鮮初期의 정치적 변화와士林派의 등장」, 『한국학논집』 제45집(2011), 25-54쪽 참조.

58) 조선 후기 사회상이 고려시대의 사회상과는 뚜렷이 다르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신유학에 입각한 친족제도와 여성의 변화상에 주목한 연구로는 Martina Deuchler 저, 이훈상 역, 『한국의 유교화 과정』(너머북스, 2013) 참조.

59) 김영민, 앞의 논문, 10-11쪽.

60) 위의 논문, 1-21쪽.

교육적 전망이 나타난 18세기 조선사회를 조망하는 데 ‘서당’은 매우 유용한 분석대상이다. 17세기 이후 대부분의 서원이나 향교가 제향의식에 몰두하여 강학활동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던 데 반해, 시종일관 교육 활동에 전념한 곳이 서당이다. 서당은 앞서 살펴본 18세기 향촌사회의 변화, 즉 향권과 관권 사이의 점점에 위치했고, 향촌통제력을 두고 향권과 관권이 충돌하고 조정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서당을 통해 확인되는 특이한 사실은 18세기 이후 강상윤리의 최후보루가 되어야 할 서당 훈장들이 모역이나 패서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⁶¹⁾ 조선 후기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통해 발생한 잔반층의 유민화로 고용훈장이 다수 발생했고, 이들은 당시 민간신앙이나 참위사상 등에 근거해 향촌민들의 불만을 결집하기도 하였다. 실제 18세기 서당에는 탈명륜(脫明倫)적인 교재들이 등장한다. 중인계층이었던 장혼의 『아희원람(兒戲原覽)』⁶²⁾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⁶³⁾

또한 18세기 서당에는 비사족(非士族) 계층의 참여가 확대된다. 서울과 도회지를 중심으로 하여 중인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노비의 서당 운영 사례도 나타난다. 경제적으로는 ‘소농층’이 서당 운영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 자율적 결사체의 한 흐름인 ‘계(契)’의 확산도 이러한 향촌사회의 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 18세기 후반 이래 사족집단의 향촌사회에 대한 지배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국가는 재지사족을 매개로 하는 종래의 지방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농민과 촌락에 대한 직접 지배를 시도하게 되었다. ‘동계’의 변화 또는 새로운 응세조직(應稅組織)으로서의 군포계·호포계·보민계의 출현은 이와 같은 향촌사회 변동의 배경하에서 이해될 수 있다.⁶⁴⁾

61) 놀랍게도 16세기 말 선조 22년 정여립의 사건에서도 “길삼봉(吉三峰)이 모주(謀主)이고 [···] 중 의연(義衍), 도사(道士) 지함두(池涵斗)가 서당(書堂)에 주재하여 함께 거처하며 모의하였습시다”와 같이 서당 훈장이 역모에 연루된 기사가 보인다. 『선조수정실록』 선조 22년(1589) 10월 1일 6번째 기사.

62) 『아희원람』은 1803년(순조 3) 간행한 아동교재로 사대부 중심의 『소학』류의 교재 형식을 과감히 허물어버리고 민간 유희, 민속, 민담, 국속(國俗) 등 조선에 대한 새로운 역사인식 및 교육관을 드러낸 책이다(정순우, 앞의 책, 483쪽).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각본(坊刻本)으로 출판된 이 책은 우리의 역사와 풍속을 자세히 소개하여 아동들이 중국 중심의 문화관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

63) 정순우, 위의 책, 5-11쪽.

64) 김필동, 『契의 역사적 분화·발전 과정에 관한 試論: 朝鮮時代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7권(1990), 72쪽.

‘서당계’의 확산은 서당의 신분적 변화를 급속하게 한 배경이자 관련 서당 개입을 약화하는 배경이기도 하였다.⁶⁵⁾

당시 서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영조가 서당의 ‘민란’ 개입을 우려해 서당을 없애도록 지시⁶⁶⁾한 것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정조 역시 서당을 “좌도(左道)로 대중을 현혹하는 부류”로 간주하고, 엄단을 지시할 정도였다.⁶⁷⁾ 영조대의 서당 훈장 박처웅 사건(일명 ‘남원괘서’ 사건)에서 확인된 ‘남사고(南師古)의 비결’에는 ‘우리도 평민에 있을 날이 오래지 않을 것이다. 왕후 장상(王侯將相)이 어찌 종자가 있는가?’와 같은 지배이념으로서의 성리학에 반하는 급진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⁶⁸⁾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모역이나 괘서의 주요 내용이 참위사상이나 개혁사상과 더불어 공자의 ‘대동(大同)사상’의 핵심 내용인 ‘천하위공(天下爲公), 선현여능(選賢與能)’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성리학의 정수는 ‘주자학’이었다. 놀랍게도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에는 ‘대동’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⁶⁹⁾ 주자학의 핵심에 ‘대동’이나 이상사회론에 대한 언급이 전무했는데도 대동의 핵심 내용이 곳곳에서 괘서의 내용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선의 결사체 영역에 반성리학적·탈성리학적 흐름이 분명하게 존재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조선시대 정치·사회적 결사체의 사상적 근간을 구성한 이념, 또는 사상, 민중신앙적 요소들은 지배이념으로서의 성리학적 범주로는 포섭할 수 없는 질적으로 판이한 내용들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었다.

65) 소농민들은 18세기 이후 지주제의 해체와 함께 서당 운영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양법의 확산과 농기구 혁신, 수리시설 확충 등에 따른 생산력 향상과 소상품 생산 등이 전호의 경제적·인격적 자립기반이 되었다. 소농민층의 서당 교육 참여는 기존의 계 조직을 활용한 서당계의 활용도 한몫하였다. 소농층의 경제적 난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계조직이었다. 1755년 춘천 북중면에서 조직된 교영계(敎英契)는 학장을 모셔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갖는 대표적 서당계였다. 정순우, 앞의 책, 480쪽.

66) 『朝鮮王朝實錄』, 영조 32년 10월 4일, 2번째 기사.

67) 『朝鮮王朝實錄』, 정조 7년(1738) 10월 29일, 3번째 기사

68) 『朝鮮王朝實錄』, 영조 9년 8월 7일, 4번째 기사

69) 이창일, 『주자대전』 대동, 소강 출현 리서치(2013), 미간행 초고.

2. 탈(脫)성리학적 사상의 흐름

왕조의 세습군주제에 도전하는 혁명적 정치사상과 신분제 혁파를 주창하며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던 이상사회론 등이 조선 중기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정여립(鄭汝立)의 '선양론적(禪讓論的) 공화주의(70), 미륵사상의 '이상국가론', 『정감록(鄭鑑錄)』의 '말세론'과 '왕조개벽론', 서학의 '추대왕론' 등 다양하다. 이런 사상들과 신왕조예언서들은 서당 보급의 보편화, 인쇄술 발전, 향촌사회의 신분변동과 결합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18세기 신분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잔반, 또는 평민 지식인들이 이러한 사상과 예언서를 전국적으로 유포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정조 6년(1782) 11월에 발각된 '정감록 역모사건'의 핵심 주도자인 문인방 등의 경우 이미 어린 시절 한글본 『정감록』을 읽었고, 정감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거사를 도모할 정도로 이 영향은 '실체적'이었다.⁷¹⁾

정여립의 공화주의 사상은 기축사화(1589)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기축사화는 3년(1589-1591) 동안 1,000여 명의 선비를 '집단학살'한 조선조의 최대사화였다. 죄목은 정여립이 '천하공물(天下公物)론과 왕위선양제의 대동이념을 표방하며 반상차별 없는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고, '목자망전읍흥(木子亡國邑興)'의 역성혁명적 정씨왕조론과 '전주왕기설(全州王氣說)'의 참언을 퍼뜨려 조선왕조를 무너뜨리려는 모반을 꾀했다는 것이다.⁷²⁾ 이 기축옥사의 집단학살로 응어리진 원한과 비원(悲願)은 100여

70) 『선조수정실록』 22년 10월 1일(을해) 7번째 기사에 정여립의 핵심 논지가 나타나 있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의 《통감(通鑑)》은 위(魏)로 기년(紀年)을 삼았으니 이것이 직필(直筆)인데 주자(朱子)가 그것을 그르게 여겼다. 대현(大賢)의 소견이 각기 이렇게 다르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바이다. 천하는 공물(公物)인데 어찌 정해진 임금이 있겠는가. 요(堯)임금, 순(舜)임금, 우(禹)임금은 서로 전수하였으니 성인이 아닌가" 하고, 또 말하기를,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왕축(王黻)이 한때 죽음에 임하여 한 말이지 성현(聖賢)의 통론(通論)은 아니다. 유하혜(柳下惠)는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는가' 하였고, 맹자(孟子)는 제선왕(齊宣王)과 양혜왕(梁惠王)에게 왕도(王道)를 행하도록 권하였는데, 유하혜와 맹자는 성현이 아닌가" 하였다.

71) 고성훈, 앞의 책, 104쪽; 백승중, 『정감록 역모사건의 진실개입』(푸른역사, 2007), 176쪽.

72) 『선조수정실록』 22년(1589) 10월 1일조. "이보다 앞서 100여 년 전에, 민간에 '木子亡國邑興'의 참언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정여립은 이 참언을 지어낸 자가 아니라, 활용한 자다. 또 실록은 "連山縣 계룡산 開泰寺 터는 곧 후대에 鄭氏가 도읍할 곳이다"라는 말도 "國初 이래로 있었던 讖說"이라고 쓰고 있다. 반면, 실록은 정여립의 수하 요승 義衍이 "내가 요동에 있을 때에 조선을 바라보니 王氣가 있었는데, 조선에 와서 살펴보니 王氣가 전주 東門 밖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전주에 왕기가

년 뒤 영·정조 시대에 대유행한 도참서 『정감록』을 통해 정여립과 같은 종씨인 정씨의 왕조가 열린다는 왕조개벽설로 다시 터져 나왔다. 백승중은 조선왕조를 부정하는 『정감록』의 유토피아적 도참사상을 “조선 후기 성리학에 대항하여 평민 지식인이 내놓은 일종의 대항 이데올로기”였다고 평가한다.⁷³⁾ 평민 지식인들은 공자철학의 탈(脫)주자학적·군자유학적·유토피아적 해석을 도모한 정여립 중심의 창조적 지식인 집단에 음양으로 동조하고, ‘지식인대학살’을 자행한 잔인무도한 억압권력의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분노하여 결사적으로 왕조전복 도참설을 전파·확산시켰다.⁷⁴⁾

조선시대 지배층의 성리학 이념과 달리 ‘민’의 결사체 영역을 관통한 사상적 정수는 ‘대동사회’·‘개벽세상’의 평등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동사상과 당시의 이상사회론, 참위사상 등이 결합되었다. 공자는 천하와 나라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기(公器)이고, 소유제도 면에서 자기 것과 남의 것이 있되, 자기 것으로 기꺼이 남을 돕고, 각종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챙기는 완벽한 사회복지·완전고용·평화안전이 보장되고, 제 부모, 제 자식을 먼저 챙기지만 제 부모, 제 자식만 사랑하지 않는 범애(汎愛)·범인(汎仁)의 세상을 이상세계로 삼았다.⁷⁵⁾ 이것이 공자가 『예기』 「예운」편에서 기술한 ‘대동’ 세상이다. 반대로 내 것, 네 것이 분명히 나날 뿐만 아니라 내 것을 아껴 남을 돕지 않고 내 부모, 내 자식만 사랑하며, 천하와 나라가 개인의 사유물인 세상은 ‘소강(小康)’이라 불렀다.⁷⁶⁾ ‘대동’이 정치적 이상사회라면, ‘소강’은 당대의

있다’는 말이 원근에 전파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전주왕기설’은 정여립 측이 만든 것이다. 한편, 실록은 “海西에 떠도는 말이 자자했는데, 호남 전주지방에 성인이 일어나서 우리 백성을 구제할 것이다. 그때는 水陸의 조례(皂隸)와 일족·이웃의 徭役과 推刷 등의 일을 모두 감면할 것이고, 공·사 노비와 서얼의 앞길을 가로막고 급하는 법을 모두 革除할 것이니 이로부터 국가가 태평하고 무사할 것이다”라고 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현혹되어 왈자하게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선조수정실록』 22년(1589) 10월 1일조. 민중이 ‘왈자하게’ 지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여립의 이 ‘혁제’ 내용은 150여 년 뒤 영·정조의 혁파정책과 거의 일치한다. 황태연, 앞의 논문(2012b), 204쪽 재인용.

73) 백승중, 앞의 책(2007), 6쪽.

74) 황태연, 앞의 논문(2012b), 204쪽.

75) 공자의 대동사상에 기반하여 공맹 양민철학의 비교철학적 재조명을 시도하고 있는 논의로는 황태연, 앞의 논문(2012a), 316-410쪽. 참조.

76) 『예기』 「예운」편. “대도가 행해질 적에 천하는 공기(公器)였고(天下爲公), 현인과 능력자를 선출해 썼고(選賢與能), 신의를 다지고 화목을 닦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직 제 아버지만을 친애하지 않았고 오직 제 자식만을 사랑하지 않았다. 노인은 생을 마칠

현실이였다.

정감록신앙과 미륵신앙의 여러 개혁사상적 요소들은 숙종 14년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한 승려 여환의 변란 작변 사건, 영조 집권 초기 ‘이인좌의 난(무신란)’ 등에 영향을 미쳤고, 앞서 살펴본 일명 ‘남원괘서’ 사건의 ‘남사고 비결’뿐만 아니라 ‘문인방·이경래’ 사건 등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된다.⁷⁷⁾ 이러한 대동-개벽 사상의 흐름은 1860년 동학을 창도한 최제우에 의해 집대성된다. 최제우는 일절 ‘리(理)’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기일원론(至氣一元論)’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⁷⁸⁾ 수운은 ‘양반 상놈이 없고, 가난뱅이가 부자 되고, 여성과 어린이가 상전이 되고, 우리 민족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운개벽사상(時運開闢思想), 즉 ‘시천주(侍天主)’의 인간해방론을 바탕으로 ‘경천수덕·만민입신군자론(敬天修德·萬民入信君子論)’과 반봉건·반외세 ‘보국안민·광제창생론(輔國安民·廣濟蒼生論)’을 폈다.⁷⁹⁾ 그리하여 이상사회를 향한 이 민중적 개혁사상은 탕평군주들의 예방혁명적 민국체제가 세도정치로 무력화되자마자 막 바로 조선왕조를 위협하는 성숙도와 비등점에 도달했다. 이것은 1811년 홍경래의 난으로 시작하여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마감되는 ‘민란·변란·혁명의 시대’가 웅변으로 증언해준다.⁸⁰⁾

대동-개벽 사상에 의해 결집된 흐름은 19세기 말 동학에 이르러 만개(滿開)하고, ‘접·포(接·包)’라는 자율적 결사체로 구체화되었다.⁸¹⁾

곳이 있었고, 장정에게는 쓰일 곳이 있었고, 어린이는 키워줄 곳이 있었고, 환(鰥)·과(寡)·고(孤)·독(獨)과 폐질자는 보살펴줄 곳이 있었다. 남자는 직분이 있었고 여자는 시집갈 곳이 있었다. 재화는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했으나 반드시 자기에게만 숨겨져 있지도 않았고, 힘은 몸에서 나오는 것을 싫어했으나 반드시 자기만을 위하지 않았다. 이러므로 계모(計謀)가 단혀 일어나지 못했고 도둑과 난적이 활동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바깥문을 닫지 않았다. 이것을 일러 대동이라 한다(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故, 人, 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 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 外戶而不閉, 是謂大同).”

77) 고성훈, 앞의 책, 91-126쪽; 정순우, 앞의 책, 271-313쪽.

78) 『동경대전』 「포덕문」, 「논학문」, 「불연기연」편 참조.

79) 표영삼, 『동학 1: 수운의 삶과 생각』(통나무, 2004), 『동학 2: 해월의 고난역정』(통나무, 2005); 김용휘, 『최제우의 철학』(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80) 황태연, 앞의 논문(2012b), 203-204쪽.

81) 접(接)은 대략 50여 명의 동학도 모임이며, 접주가 중심이 되어 경전을 논하거나 강론을 듣거나 다른 접들과 소식을 전달하는 공적인 장소였다. 이 접주제는 1862년 최제우가 창설한 제자들의 모임이었으며, 1864년 수운이 참형되고 사라진 것으로 보였으나 1878년 해월에 의해 강원도를 기점으로 다시 설치되고, 1890년대에 전국에 걸쳐 형성된다(오문환, 「동학사상에서의 자율성과 공공성」,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동학의 자율적 결사체는 조선의 지배이념이었던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결사체 영역이 일제에 의해 포섭되거나 무기력해졌을 때, 국난을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결사체 역할을 하였다. 1880년대에 이르면, 거의 전국에 걸쳐서 자율과 평등의 새로운 의식을 갖춘 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사체를 이루며 조선사회가 처한 정치·사회적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⁸²⁾ 19세기 말 민의 자율적 결사체는 (탈성리학적) 대동사상 또는 개혁사상을 바탕으로 이미 정치적 공공성이 파탄 난 반동정체(세도정치)기 정치사회의 주체로 등장할 만큼 성장해 있었다.

V. 맺음말

이 글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개되고 있는 조선시대 ‘시민사회’ 논쟁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봉당정체-민국정체-반동(세도)정체’로 이어져온 조선의 정체 변화를 ‘민’의 관점으로 읽어보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시민사회’ 논쟁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존 논쟁에서 제기된 시민사회의 개념 정의를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 일정한 개념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전제는 ‘국가로부터 자율적(영역)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전제는 ‘결속력을 갖고 사회적·공적 역할을 하는 (사적)결사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에 따르면, 조혜인의 ‘공민사회’ 논의는 16-17세기 봉당정체가 분석에는 적절하지만 조선 후기 이후 ‘민’의 자발적 결사체의 구조 변화와 확장적 측면까지 그 설명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둘째,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강한 통제 때문에 국가로부터 자율적 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는 조혜인의 지적과 같이 ‘오해된 동양적 전제주의’의 편견이라는 점이다. 예상보다 이 편견의 영향력은 강하게

2002, 17-18쪽; 박맹수, 「동학의 교단조직과 지도체제의 변천」,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1993, 305쪽; 표영삼, 앞의 책, 2005, 301-302쪽). 포(包)는 기능적 동학도의 수적 증가에 부응하고 대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집에 뿌리내려 설치된 상위조직이다(오문환, 앞의 논문, 2002, 19쪽; 표영삼, 앞의 책, 2005, 303-304쪽). 82) 오문환, 위의 논문(2002), 17쪽.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조선시대 공민사회를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 제기하는 조혜인조차 성리학적 지배이념이 일관되게 관철된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이다. 이 문제는 주로 제4장에서 다루었는데, 필자는 조선의 정치사회가 통치이념으로서의 성리학과 그 지배질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갈망하는 대동-개벽 사상이 대립해왔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8세기 이후 신분제의 변동과 향촌사회의 구조 변화가 진행되면서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관철은 한층 더 취약해졌고, 특히 계, 서당, 종교적·정치적 결사와 같은 결사체의 영역은 참위론, 이상사회론, 대동사상 등을 중심으로 한 탈성리학적 흐름이 지배적이었다. 국가의 정치적 공공성이 과탄에 처한 19세기 말 조선 정치사회에서 대동-개벽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민의 결사체는 중요한 정치사회의 주체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시민사회' 또는 '결사체' 영역은 그동안 다양한 개념과 방법을 동원하여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조선시대 '시민사회'의 존재 여부를 논구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공민사회'의 존재를 제기한 조혜인의 선구적 연구로 조선의 '시민사회'를 둘러싼 논의가 촉발될 수 있었고, 다양한 비판과 새로운 문제제기 덕분에 한층 진전된 논의가 가능해졌다. 이 글은 '결사체' 개념을 통하여 조선시대 '시민사회'를 시기적·주체적·범주적 차원에서 분석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적 전환기인 18세기 이후 조선시대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주체적으로는 '재지사립'만이 아니라 '민'의 다양한 결사체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오랜 편견과 달리 조선의 정치는 '붕당에 의한 공치', '탕평과 민국으로의 전환', '반동정체기 민의 정치적 부상' 등 다양한 정치사회의 역동성을 추적해왔다. 부족하나마 이 연구가 조선정치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高麗史』, 『東經大全』, 『承政院日記』, 『禮記』, 『朝鮮王朝實錄』.
- 강광식, 「봉당정치와 조선조 유교정치체제의 지배구조 변동 양상」. 『OUGHTOPIA』 24(1),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101-136쪽.
- 고성국,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 『아시아문화』 제10호, 1992, 181-203쪽.
- 고성훈, 『민란의 시대』. 가람기획, 2004.
- 교과서포럼,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기과랑, 2008.
- 교수신문 기획·역음, 『고종황제역사청문회』. 푸른역사, 2005.
- 김백철, 『영조: 민국을 꿈꾼 탕평군주』. 태학사, 2011.
- _____, 「朝鮮時代 歷史像과 共時性的의 재검토: 14-18세기 한국사 발전모델의 모색」. 『韓國思想史學』 第44輯, 2013, 269-315쪽.
- 김범, 「조선시대 사림세력 형성의 역사적 배경」. 『국학연구』 19집, 2011, 9-33쪽.
- 金成潤, 『朝鮮後期 蕩平政治研究』. 지식산업사, 1997.
- 김영민, 「조선시대 시민사회론의 재검토」.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3호, 2013, 1-21쪽.
- 김용덕, 『향안연구』. 한국연구원, 1978.
- 김용휘, 『최제우의 철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 김윤희, 「근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인민 개념 형성(1876-1984)」. 『역사문제연구』 제21호, 2009, 295-331쪽.
- 김인걸, 「朝鮮後期 鄉權의 추이와 지배층 동향: 忠淸道 木川縣 事例」. 『한국문화』 제2집, 1981, 167-251쪽.
- _____, 「조선 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제19권, 1988a, 318-323쪽.
- _____, 「조선 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의 변동과 ‘民」」. 『한국문화』 제9집, 1988b, 321-331쪽.
- _____, 「조선 후기 촌락조직의 변모와 1862년 농민저항의 조직기반」. 『진단학보』 제67호, 1989, 45-74쪽.
- _____, 「17, 18세기 향촌사회 신분구조 변동과 ‘儒·鄉」」. 『한국문화』 제11집, 1990, 303-340쪽.
- 김필동, 「契의 역사적 분화·발전 과정에 관한 試論: 朝鮮時代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7권, 1990, 54-88쪽.
- 김호기, 「그람시적 시민사회론과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 한국적 수용을 위한 비판적 탐색」. 『경제와 사회』 19권, 1993, 1-21쪽.
- 김훈식, 「朝鮮初期의 정치적 변화와 士林派의 등장」. 『한국학논집』 제45집, 2011,

25-54쪽.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박맹수, 「동학의 교단조직과 지도체제의 변천」.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1993.

_____,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모시는사람들, 2009.

방상근, 「18-19세기 서울 지역 천주교도의 존재 형태」. 『서울학연구』 제26호, 2006, 46-74쪽.

배연숙, 「위당 정인보의 조선학 성립배경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 59권, 2010, 406-414쪽.

백승중, 『정감록 역모사건의 진실게임』. 푸른역사, 2007.

_____,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2012.

성주현, 「일제강점기 천도교청년당의 대중화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0집, 2008, 257-297쪽.

송호근, 「공론장의 역사적 형성과정: 왜 우리는 不通社會인가?」. 『한국 사회의 소통위기: 진단과 전망』,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2011, 27-48쪽.

신주백, 「'조선학운동'에 관한 연구동향과 새로운 시론적 탐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7권, 2011, 188-190쪽.

심인보, 「19세기 말 미국농민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의 비교사적 검토와 시론(I)」. 『東學研究』 제21집, 2006, 131-158쪽.

오문환, 「동학사상에서의 자율성과 공공성」.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2002, 7-23쪽.

_____, 「동학에 나타난 민주주의: 인권, 공공성, 국민주권」. 『한국학논집』 제32집, 2005, 179-212쪽.

유권중, 「한국의 실학과 근대성에 관한 논의」. 『한국민족문화』 제39호, 2011, 3-29쪽.

유병용,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재검토: '자유'와 '권리'의 동양적 이해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24집 1호, 2002, 141-165쪽.

유팔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이석규, 「朝鮮初期 官人層의 民에 대한 認識」. 『역사학보』 제151집, 1996, 35-69쪽.

이성무, 『조선 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연구논총 92-7). 정신문화연구원, 1992.

이영재, 「조선시대 정치적 공공성의 성격 변화: '民'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제19집 1호, 2013, 59-84쪽.

이영훈, 『수령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 후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_____, 『대한민국이야기』. 기과량, 2007.

이태진,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13-26쪽.

_____, 「사화와 봉당정치」.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 _____, 「대한제국의 황제정과 민국정치이념」. 『한국문화』 제22권, 1998, 233-276쪽.
- _____, 「18세기 韓國史에서 民의 사회적·정치적 위상」. 『진단학보』 제88호, 1999, 249-263쪽.
- 이태진·김백철 엮음, 『조선 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上』. 태학사, 2011.
- 이창일, 『주자대전』 대동, 소강 출현 리서치. 미간행 초고, 2013.
- 이현주, 「일제하 (수양)동우회의 민족운동론과 신간회」. 『정신문화연구』 제26권 제3호 가을호, 2003, 185-209쪽.
- 이현출, 「사람정치기의 공론정치 전통과 현대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2002, 115-134쪽.
- 李海濬, 「朝鮮後期 晋州地方 儒戶의 實態: 1832년 晋州鄕校修理記錄의 分析」. 『진단학보』 제60호, 1985, 79-100쪽.
- 장규식, 「1920-30년대 YMCA 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호, 1995, 207-261쪽.
- _____, 「YMCA학생운동과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0집 봄호, 2002, 108-140쪽.
- 전병재, 「공동체와 결사체」. 『사회와 이론』 제1집 창간호, 2002, 49-78쪽.
-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서당으로 읽는 조선교육의 흐름』. 태학사, 2013.
- 정태석,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유럽과 한국의 유사성과 차이」. 『경제와 사회』 제72권, 2006, 125-147쪽.
- 조혜인, 『공민사회의 동과 서: 개념의 뿌리』. 나남, 2009.
- _____, 『동에서 서로 퍼진 근대 공민사회』. 집문당, 2012.
- 참여사회포럼,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국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시민과 세계』 제24호, 2014, 276-310쪽.
- 최배근, 「시민사회(론)의 불완전성과 '公民'의 역사적 성격」. 『경제와 사회』 제19권 1993, 59-77쪽.
- 최이돈, 『조선중기 사람정치구조연구』. 일조각, 1994.
- 최장집·임현진 공편, 『시민사회의 도전』. 나남, 1993.
- 표영삼, 『동학 1: 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2004.
- _____, 『동학 2: 해월의 고난역정』. 통나무, 2005.
-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식민지근대화론의 이해와 비판』. 백산서당, 2004.
- 한승연, 「조선 후기 民國 再造와 民 개념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2012, 58-63쪽.
- 한홍구, 「한국의 시민사회, 역사는 있는가」. 『시민과 세계』 1권, 2002, 91-110쪽.
- 홍원식 외, 『실학사상과 근대성』. 예문서원, 1998.
- 황태연, 『지배와 이성』. 창작과 비평사, 1996.

- _____, 「서구 자유시장론과 복지국가론에 대한 공맹과 사마천의 무위시장 이념과 양민철학의 영향: 공자주의 경제·복지철학의 보편성과 미래적 함의에 관한 비교철학적 탐색」,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2호, 2012a, 316-410쪽.
- _____, 「조선시대 국가공공성의 구조변동과 근대화」,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변동: 국가·공론·민의 공공성, 그 길항과 접합의 역사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2b.

- Black, Antony, *Guilds and Civil Society in European Political Thought from the Twelfth Century to the Present*, Cambridge Univ. Press, 1984.
- Cho, Hein, "The Historical Origin of Civil Society in Korea." *Korea Journal* Vol. 37. No. 2, 1997, pp. 24-41.
- Cohen, J. L. & Arato, A.,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MIT press, 1992.
- Deuchler, Martina 저, 이훈상 역,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2013.
- Duncan, John, "The Problematic Modernity of Confucianism: the Question of 'Civil Society' in Choson Dynasty Korea," in Charles K. Armstrong eds.,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London: Routledge, 1992 · 2006, pp. 33-52.
-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1821). translated by T. M. Knox, *Hegel's Philosophy of Right*, Oxford University, 1967.
- Keane, J.,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Verso, 1988.
- MacIver, Robert, M., *On Community, Society, and Power*. ed., by Leon Bams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Riedel, Manfred, *Stud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69, 황태연 역, 『헤겔의 사회철학』, 한울, 1983.
- Steinberg, David,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in Korea." *Korea Journal* Vol. 37, No. 3, 1997, pp. 145-165.
- Warren, Mark E., *Democracy and Associ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국 문 요 약

이 글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개되고 있는 조선시대 ‘시민사회’ 논쟁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붕당정체-민국정체-반동(세도)정체’로 이어져온 조선의 정체 변화를 새롭게 설명하고자 시도 하였다. 조선시대 ‘시민사회’ 논쟁의 재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자율적(영역)’이자 ‘결속력을 갖고 사회적·공적 역할을 하는 (사적)결사체’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기존 ‘공민사회’ 논의는 16-17세기 붕당정체기 분석에는 적절하지만 조선 후기 이후 민(民)의 자발적 결사체의 구조 변화와 확장적 측면까지 그 설명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둘째,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강한 통제 때문에 국가로부터 자율적 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는 ‘동양적 전제주의’의 편견이라는 점이다. 조선의 정치사회는 통치이념으로서의 성리학과 그 지배질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갈망하는 대동-개벽 사상이 대립해왔다. 18세기 이후 신분제의 변동과 향촌사회의 구조 변화가 진행되면서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관철은 한층 더 악화되고, 다양한 결사체의 영역은 탈성리학적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다. 조선시대의 ‘시민사회’ 또는 ‘결사체’ 영역은 그동안 다양한 개념과 방법을 동원하여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이 글은 기존 조선시대 ‘시민사회’를 시기적·주체적·범주적 차원에서 분석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투고일 2014. 3. 19.

심사일 2014. 5. 1.

게재 확정일 2014. 6. 3.

주제어(keyword) 시민사회(civil society), 결사체(association), 사림(backwoods literati), 성리학(Neo-Confucianism), 민(民, the people)

Critical Reinterpretation of the Controversy Surrounding 'Civil Society' in the Joseon Dynasty

Yi, Young-jae

Continual reinterpretation of Korean history is necessary because societal needs constantly evolve and earlier prejudices, for example 'Oriental despotism', need to be overcome in order to meet these needs. Thus,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political society in the Joseon Dynasty in connection with the origin and formation of 'civil society' or 'associations'. In the debate on civil society in the Joseon Dynasty, the most fundamental issue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is the presence of a sphere in the Joseon society, which is in part autonomous from the power of the state. Since the 16th century to 17th century, the backwoods literati(士林) came up with various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such as 'Hyungchong' and 'Hyangyak', which were rooted in the local communities. After that time, the subject of the civil society gradually expanded in the political society of the Joseon Dynasty, the Min(民)'s political and social role was changed by various associations, non-confucianism tendency, rise of social standing etc. The Min's associations were a gradually gaining the political and social role in the from the end of 'Bungdang(朋黨)' regime(17C) to the 'Minguk(民國)' regime(18C). The associations were a important agent to form a political publicity in the Sedo-Politics(勢道政治 19C) regime that had lost a political publicity. In the research of the Joseon Dynasty, associations areas did not been adequately illuminated.